파생결합상품 깡통속출 속 수익챙긴 투자자

금리 내릴수록 수익은 ↑… 국민은행 투자전략 通했다

국민은행 가입고객 수익 3.5~4%
우리銀 등 예상손실률 95% 달해
유안타證·미래에셋대우도 '수익'

같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이지만 결과는 엇갈렸다. 금리가 오르거나 적어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던 상품들은 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지만 금리 하락에 베팅한 상품의 경우 수익은 물론 조기상환의 기회가 찾아 왔다.

20일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에 따르면 관련 파생결합펀드(DLF)와 파생결합증권(DLS)의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이다.

회사별로는 우리은행이 40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3876억원 ▲국민은행 262억원 ▲유안타증권 50억원 ▲미래에셋대우증권 13억원 ▲NH증권 11억원 등의 순이다.

금감원은 아직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글로벌 시장을 감안하면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을 판 금융사 마다 속사정은 달랐다.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은 금리가 기준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이미 진입한 상태다. 현재 금리가 만기(올해 9~11월)까지 유지된다면 예상 평균 손실률은 95.1%에 달한다.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95만1000원을 날리는 셈이다.

반면 국민은행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손실이 아닌 당초 예상한 수익(연 3.5~4%)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에서 판매한 금리연동형 DLS상품은 미국국채 이자율스와프(CMS) 10년물 등을 기초자산으로 구성한 하이브리드형 상품이었다. 설정시보다 기초자산의 금리가 하락할수록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해 금리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헷지(위험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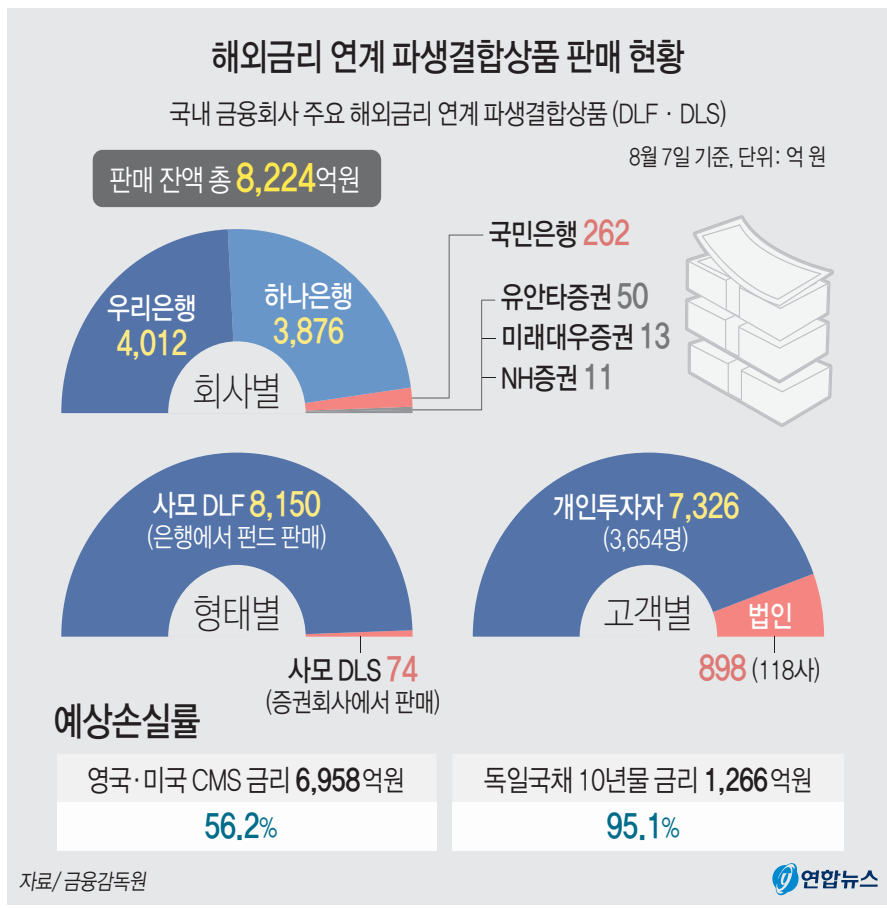
상품만기도 3년이고, 설정 후 6개월 이후에는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를 부여해 상환확률을 크게 높였다. 국민은행이 판매한 상품은 모두 기초지수의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수익구간에 도달했고, 일부 조기상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지난 6, 7월 두 달간 약 262억원을 판매했지만 최근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금리변동성 리스크가 커지면서 8월 이후로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판매규모는 크지 않지만 유안타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상품 역시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구조로 설계됐다.

지난 7월에 발매한 미래에셋대우 사모 DLS 상품도 미국 CMS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금리가 165%이상 상승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는 구조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내일은 '에너지의 날'
제 16회 에너지의 날을 이틀 앞둔 20일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에너지니가 들어주는 다섯가지 소원'에서 에너지시민연대 회원들이 관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은행 부실채권 17.5조… 0.07%p ↓

금감원, 2분기 부실채권 비율 0.91%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하락세를 이어갔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91%로 전분기 말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0.1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은 17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조원 줄었다. 기업여신이 15조5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계여신과 신용카드 채권이 각각 1조8000억원, 2000억원 규모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5%로 전분기 말 대비 4.2%포인트 상승했다.

2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4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3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000억원 늘었다.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8000억원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5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상·매각이 2조4000억원 규모로 이뤄졌으며,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와 여신정상화가 각각 1조원, 1조4000억원 규모다.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1.32%로 전분기 말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여신과 중소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이 1.95%, 0.97%로 전분기 말 대비 각각 0.16%포인트, 0.08%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25%로 전분기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은 1.38%로 전분기 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비율은 하락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상승했다"며 "향후 신규부실 추이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일본계 은행 국내여신 63%가 대기업 대출

〈13.1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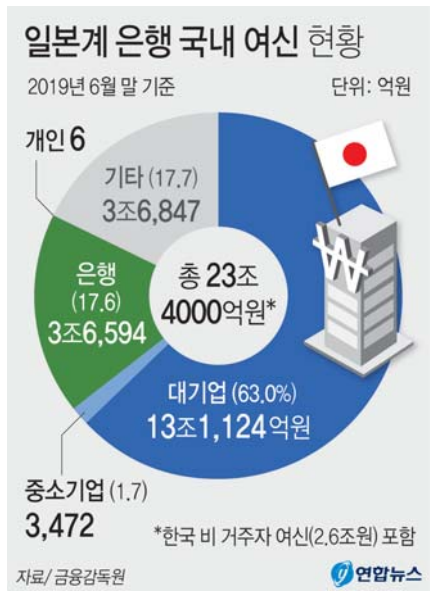
금감원, 6월말 총 여신액 23.4조
미즈호은행, 10.9조, 46.8% 차지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은행의 여신 대부분이 대기업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은행의 여신은 총 23조4000억원이다. 이는 5월 말 수치인 24조7000억원에 비해 약 1조3000억원(5.4%) 줄어든 규모다.

은행별로 보면 미즈호은행이 10조9000억원(46.8%)을 국내 기업과 기관 등에 빌려줬다.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의 한국 내 여신은 7조7000억원,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4조7000억원, 야마구찌은행은 1000억원이다.



일본계 은행 여신 가운데 대출자 주소가 한국이 아닌 이들이 빌린 2조6000억원을 제외하면 자금을 빌린 주체는 대부분 기업이었다.

기업여신이 전체 여신의 64.7%인 13조5000억원(7587건)을 차지했다. 은행 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이 빌린 자금은 17.7%(3조7000억원), 은행 여신은 17.6%(3조70000억원)였다. 가계에 빌려준 금액은 총 6억원으로 미미했다.

기업여신을 기업 규모별로 나눠보면 대기업이 빌린 금액이 13조1000억원으로 거의 전부였다. 일본계 은행의 전체 국내 여신 중 대기업이 빌린 자금이 63.0%를 차지했다. 은행 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여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 외 금융회사에 내준 여신이 2조7000억원(97건), 공공기관 여신이 1조원(648건) 있었다.

공공기관 여신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수출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맡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채권이었다. 37건은 공공기관이 일본계 은행에서 받은 일반대출이었다. /연합뉴스

국세수입 294조… 11% 껑충 '세수호황'

2018회계연도 결산분석·검토 보고서
법인실적 개선·부동산 호조 등 원인

지난해 세금수입이 전년 대비 28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 수납액 비중이 부가가치세 수납액 비중을 처음으로 넘어서 유례 없는 '세수 호황'은 법인 실적 개선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다. 특히 지난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은 3.0%로 세수탄성치는 3.54를 기록했다.

세수탄성치는 세수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수치다. 세수탄성치가 1이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수가 늘었다는 뜻이고, 1보다 높으면 경제 성장 이상으로 세수가 더 걷혔다고 본다.

세수탄성치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39를 기록한 뒤 2010년 0.81, 2011년 1.55, 2012년 1.65로 높아지다가 2013년 다시 -0.14를 찍었다. 이후 2014년엔 0.45, 2015년 1.15를 거치다 2016년 2.28까지 높아졌다. 2017년 1.74를 기록한 후 대폭 상승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탄성치에 대해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8조2000억원이 더 걷혔기 때문으로 본다. 법인 실적 개선과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이 세수 증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예정처의 경우 국세 수입 변동폭이 커지면 법인세 등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수의 비중이 늘어나고, 과세 기반의 집중도가 심화한다고 내다봤다. 또 조세제도 누진성 확대 등에도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1980~1990년대 국세 수입 증가율은 대체로 경상성장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지만, 2000년대 이후 경상성장률에 대한 국세 수입 증가율 변동폭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재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세수입 변동폭 확대 상황에서 거시 경제지표에 기반한 현행 세수추계모형만으로는 정확한 세수 추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행 모형 한계를 보완하는 등 적정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를 지적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